

금융정책과 통화정책의 평가와 전망: overview

박명호
(한국외대, WERI)

한국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2000~2022)

- 한국금융학회는 2000년에서 2022년 기간 81개 주제를 갖고 정책 심포지엄 개최
 - 가장 많이 다뤄진 주제는 지배구조(금융기업, 은행 등 지배구조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금융정책, 금융규제, 금융감독, 제도개혁 등의 순서로 키워드가 나타났음
- 한국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은 252편으로 심포지엄 당 평균 3편을 발표하였음
 - 가장 많이 다뤄진 핵심 키워드는 지배구조(금융기업, 은행 등 지배구조 분석), 고령화, 금융감독, 금융위기, 통화정책, 거시건전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주제 클라우드 보완)



금융학회 정책세미나 발표 논문 클라우드



서베이를 통한 정책평가

- 금융정책 및 통화정책 관련 전문가 대상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를 담은 서베이 결과를 최근에는 확인할 수 없었음
 - 금융정책 관련 특정 주제에 대한 서베이는 수차례 있었지만 종합 평가는 발표자료를 찾을 수 없음
 - 통화정책 관련 서베이 결과가 공개된 자료는 찾을 수 없었음
- 주제/문항 선정
 - 한국금융학회 특별 세미나의 주제 및 발표 논문을 참고
 - 관련 분야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를 수차례 개최해서 문항에 답할 주제를 선정
 - 서베이 문항을 연구진이 만든 후 서베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문항을 완성
- 서베이 전문가의 제안에 따라 문항 수는 30개를 넘지 않도록 구성
 - 종합평가 4개 문항, 금융정책 12개 문항, 통화정책 13개 문항 등 29개 문항으로 설계
- 서베이는 다수의 경제 전문가 풀을 보유하고 있는 KDI가 수행
- 금융정책과 통화정책 평가 시기는 금융시장의 자율화를 추구하기 시작한 1980~90년대 이후부터 현재로 설정

조사 대상 및 방법

- 조사대상: 경제전문가 510명
- 조사방법: 웨서베이
- 조사기간: 2022년 2월 18일 ~ 2월 23일(6일간 조사)
- 조사기관: KDI (여론분석팀)
- 주관기관: 세계경제사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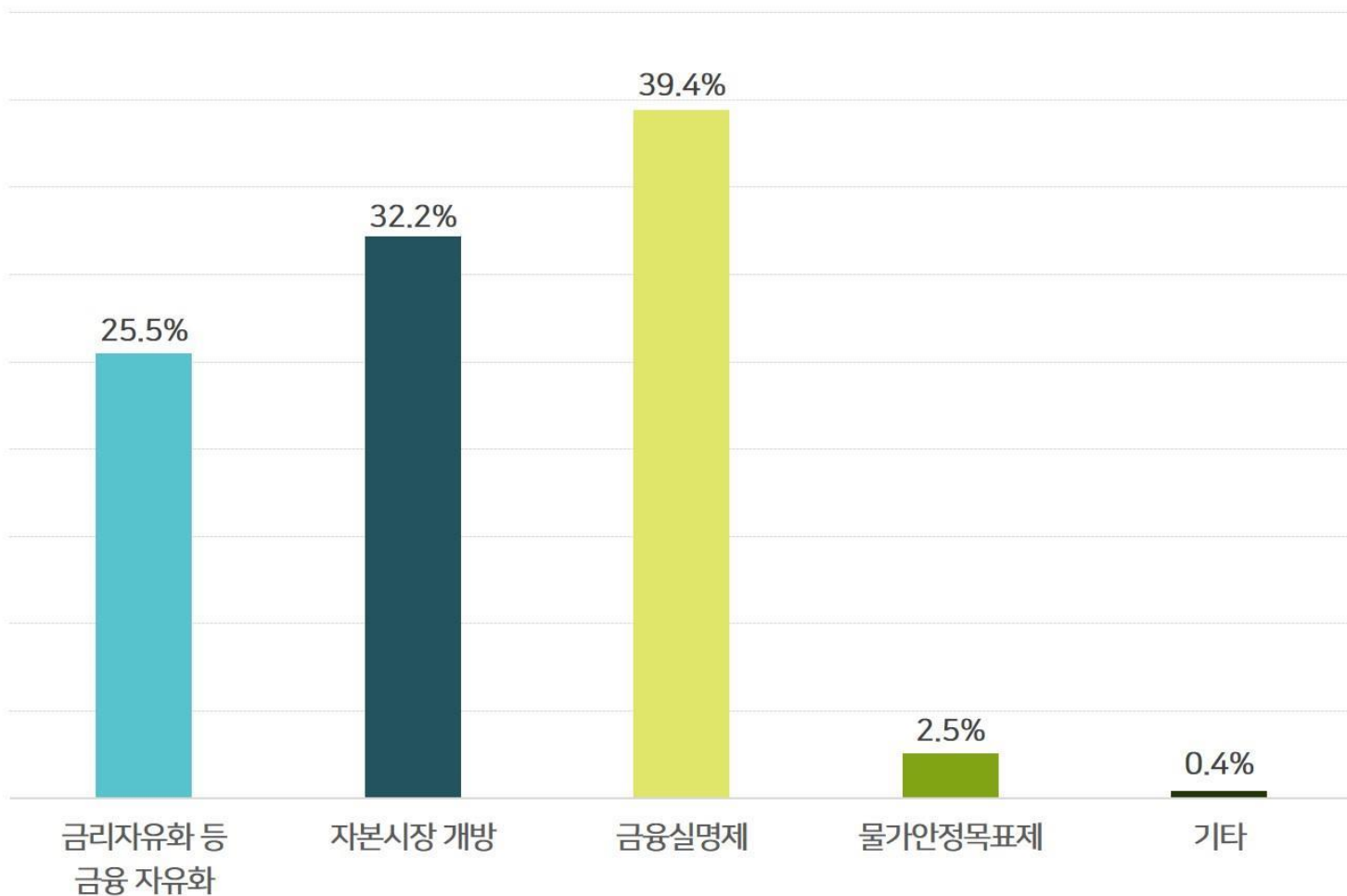
경제전문가 구성

| 직업군 | 응답자 수(명) | 비중 |
|-----|----------|--------|
| 교수 | 181 | 35.5% |
| 연구원 | 94 | 18.4% |
| 기업인 | 165 | 32.4% |
| 금융인 | 70 | 13.7% |
| 전체 | 510 | 100.0% |

한국의 금융·통화 정책 중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준 정책

- 금융 자유화: 한국은 1980년대 중반 3저 현상과 함께 금리 자유화의 조건이 갖춰지면서 1988년 12월 대출금리 자유화를 최초로 실시했으나 경기의 급격한 하강과 미국의 통상 압력으로 금리는 창구지도로 다시 전환
 - 1991년 11월부터 1995년 11월 기간 3단계에 걸쳐 대부분 금리가 자유화
- 자본시장 개방: 1990년대 이후 자율과 경쟁을 바탕으로 한 시장원리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내부적 인식의 확산과 외부의 금융시장 개방압력 가중을 배경으로 본격적으로 자본시장의 개방이 추진
 - 자본시장 자유화에 앞서 경상 지급에 대한 자유화를 먼저 시행하였고,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제한 완화 및 외국인의 국내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 허용, 채권시장 개방 등이 90년대 이루어졌음
- 금융실명제: 한국 정부는 1961년 예금, 적금 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비실명 금융거래를 사실상 보장하였다가 1982년 장영자, 이철희 부부 어음 사기사건 이후 재무부의 주도하에 금융실명제의 점진적 도입 방안을 모색
 - 비실명 예금을 적발할 수 있는 전산 및 행정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실명금융자산에 대해 세금 더 걷는 차등 과세를 유도하고자 했으나 실제로는 신규 예금에 대한 실명화만 추진
 -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 때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도입
 - 실명제의 주요 내용은 비실명계좌의 실명확인 없는 인출 금지, 순인출 3천만 원 이상의 경우 국세청에 통보, 자금출처의 조사 등을 포함
- 물가안정 목표제: 1990년대에 들어와 금리규제가 완화되고 신금융상품이 출현하는 금융혁신이 진전되면서 M2와 물가 간 안정적 상관관계가 깨지고 금리의 변동성이 확대
 - 1998년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통화량목표제가 철폐되었고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

한국의 금융·통화 정책 중 경제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정책: 서베이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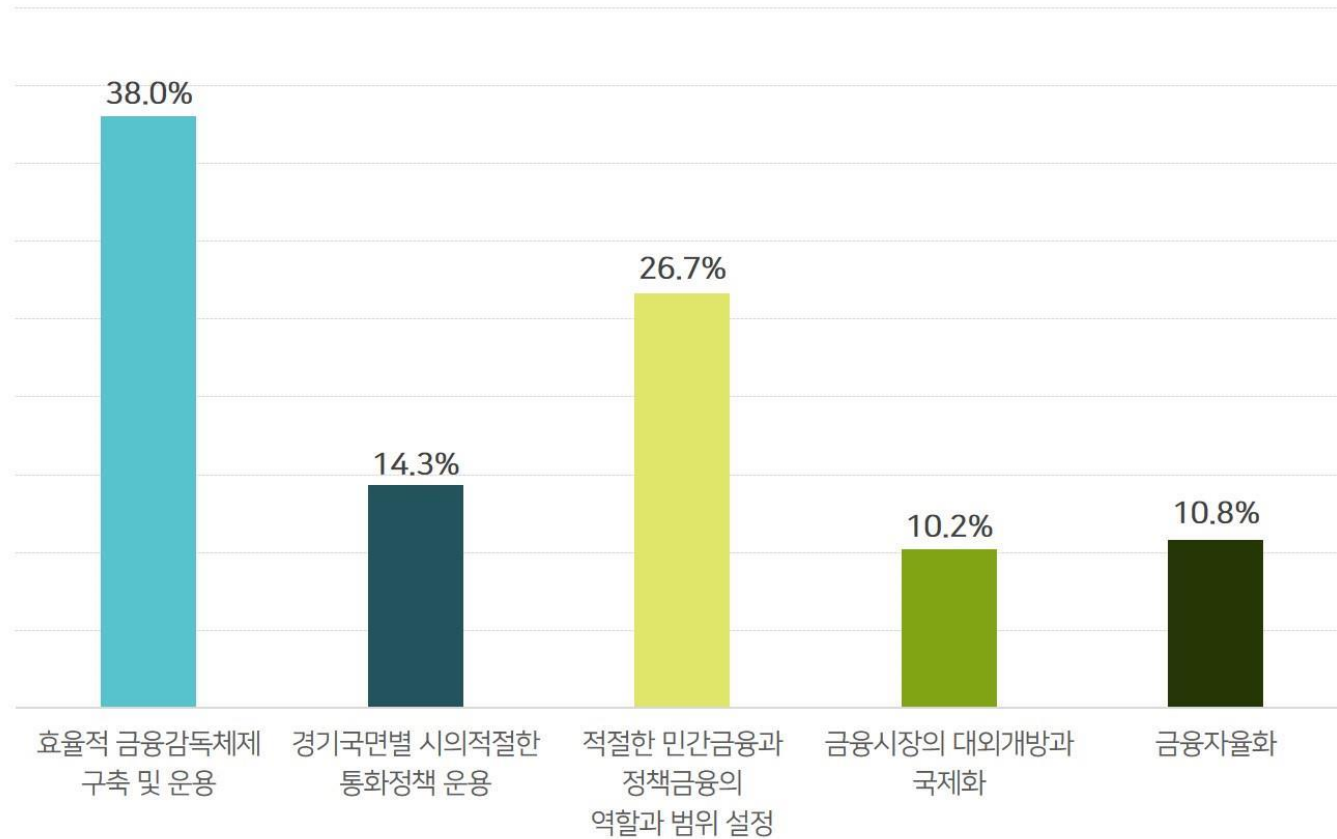


- 경제전문가(39.4%)는 1980년대 이후 시행된 금융·통화 정책 중 가장 큰 영향을 준 정책으로 '금융실명제'를 지적
- 이어서 '자본시장 개방'(32.2%), '금리자유화 등 금융 자유화'(25.5%) 순으로 응답했으며, '물가안정목표제'는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발전에 미흡하게 영향을 미친 정책

- 금융감독체제 운용:
 - 1998년 새롭게 시행된 '금융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설립되었으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금융감독체제 관련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음
- 통화정책 운용:
 - 중앙은행의 기능이 물가안정에서 금융안정과 고용증대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경기 국면별 보다 시의 적절한 통화정책이 요구
- 민간금융과 정책금융의 역할과 범위 설정:
 - 한국의 정책금융은 고속성장시기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는 여전히 높은 수준
 - 정책자금의 중복지원 및 반복지원 사례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저금리지원은 민간금융을 구축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금융시장의 대외개방과 국제화:
 - 한국 정부는 금융시장 대외개방의 일환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제한 완화, 외국인의 국내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 허용, 채권시장의 개방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시장 개방 과정에서 건전성 감독의 미흡 등의 이유로 1997년에는 외환위기를 맞았음.
- 금융자유화:
 - 금리자유화는 80년대 중반 저축이 투자를 넘어섰고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어 기업의 자금 부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금리 자유화 여건이 갖춰졌지만 초기의 성과는 다소 부진

경제발전에 미흡하게 영향을 미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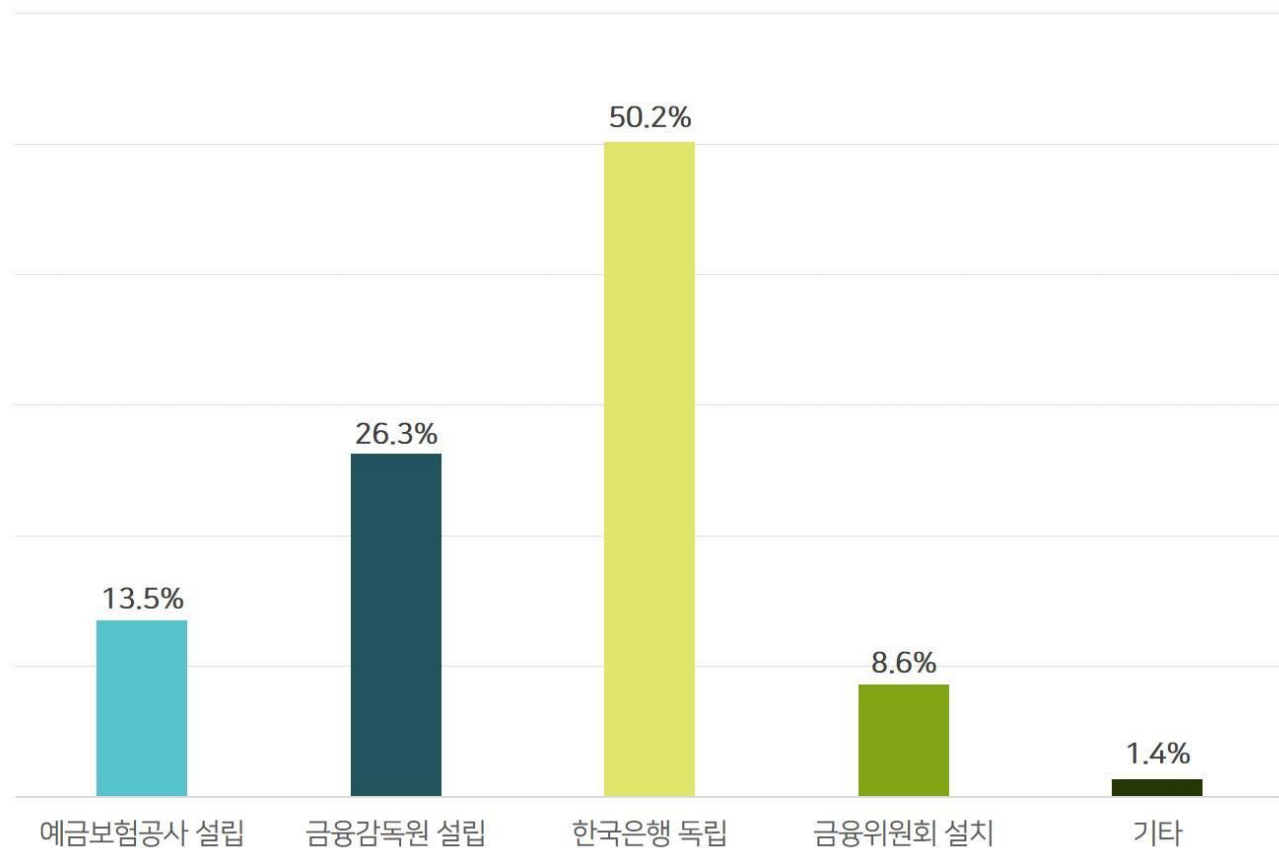


- 1980년대 이후 시행된 금융·통화 정책 중 '효율적 금융감독체제 구축 및 운용'(38.0%)이 가장 미흡하게 추진된 정책으로 나타났다
- 이어서 '적절한 민간금융과 정책금융의 역할과 범위 설정'(26.7%), '경기국면별 시의적절한 통화정책 운용'(14.3%) 순으로 응답하였음.

경제발전에 가장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온 제도 개혁

- 예금보호공사 설립
 - 재무부가 감독하던 비은행금융기관은 1980년대 초부터 금융기관별로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였음
 - 은행권은 1995년 12월 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1996년 6월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면서 명시적인 예금보험제도를 갖추었음
 - 예금보험공사는 한국은행과 함께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 불안에 대처하는 역할을 수행
- 금융감독원 설립
 -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997.12.31 제정)에 의거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1.2. 출범
- 금융위원회 설치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정책 업무 이외에도 금융산업정책 업무까지 담당
- 한국은행 독립
 -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재무부 중심의 통화관리의 비효율성이 지적
 - 1997년 12월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한국은행은 선진국 중앙은행 역할과 발맞추도록 본연의 통화관리 기능을 갖게 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독립기관이 되었음

경제발전에 가장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온 제도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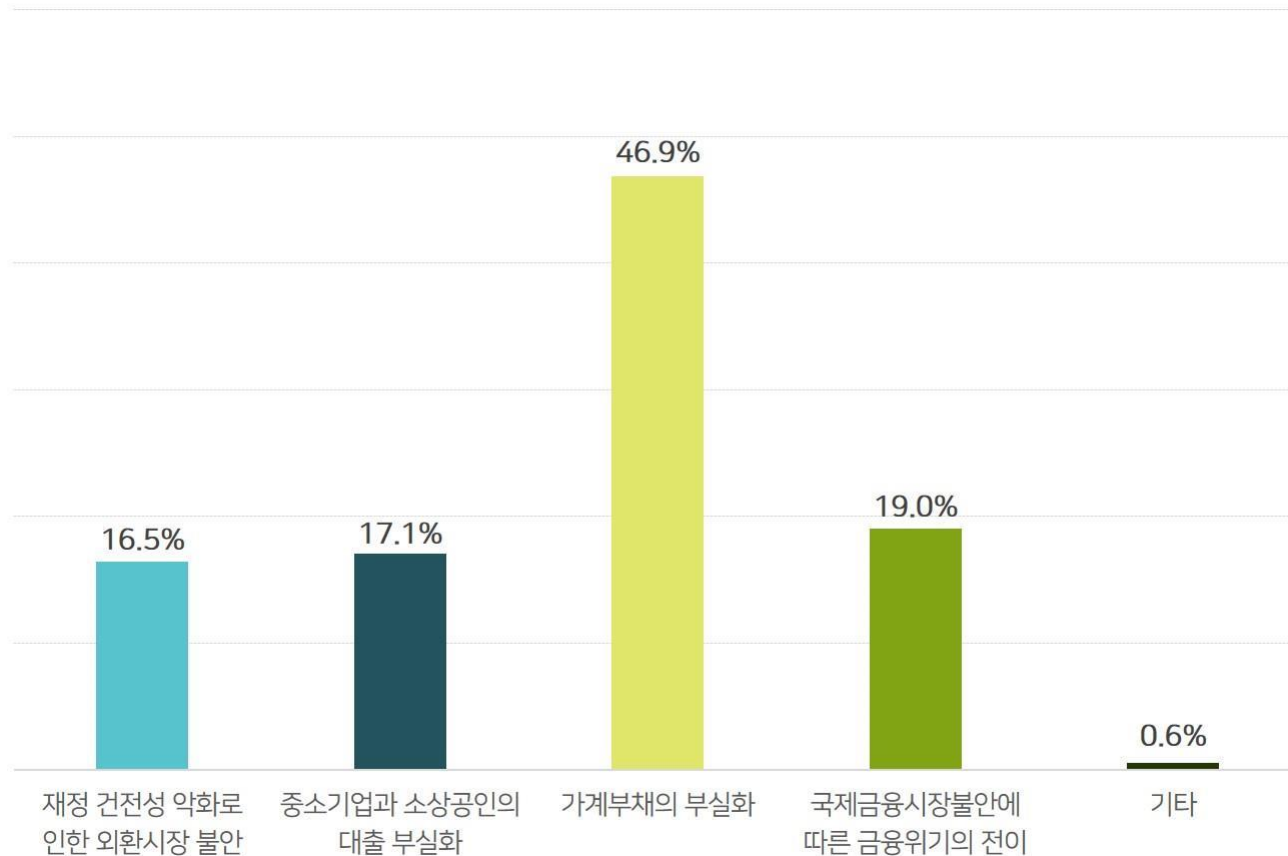


- 경제전문가의 과반인 50.2%가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제도 개혁 사례를 '한국은행 독립'이라고 지적하였음
- 이어서 '금융감독원 설립'(26.3%), '예금보험공사 설립'(13.5%), '금융위원회 설치'(8.6%) 순으로 나타났음
- 한편, 기업인은 다른 직업군보다 '금융감독원 설립'(38.4%), 금융인은 '예금보험공사 설립'(25%)에 대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우리나라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위험 요인

- 가계 부채
 - 2021년 3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1,844.9조원으로 1년 전(1,681.8조원)보다 9.77% 증가
 -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와 속도를 GDP 상위 30개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는 모두 걱정스러운 수준 (한국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명목 GDP 대비 104.9%로, GDP 상위 30개국의 가계부채 평균 63.2%를 크게 넘었고, 최근 10년간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 증가 폭은 31.7%p로 선진국 평균 6.9%p와 큰 격차를 보였음)
- 소상공인 대출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1년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87.5조원으로 1년 전 777.4조원보다 14.2% 증가
 - 자영업자의 대출은 2020년 1분기부터 10.0%로 증가 속도가 빨라지다가 2021년 1분기에는 18.8%로 역대 최대치
- 재정 건전성
 -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 비율은 2021년 기준 51.3%로 선진국 평균 121.6%와 비교해 낮은 수준
 - 다른 선진국의 경우 향후 국가채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나, 한국의 채무는 2024년 60%를 넘어 향후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
 - 한국의 일반정부의 채무 증가 속도는 선진국 상위 35개국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고 있음
-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그 전이
 - 주요 선진국의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통화정책 정상화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은 증가
 -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위험 요인: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긴축 조치, 인플레이션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지적
 -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경제제재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더욱

우리나라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위험 요인



-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금융위험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가계부채의 부실화'(46.9%)를 지적인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이어서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금융위기의 전이'(19.0%),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부실화'(17.1%),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16.5%) 순으로 응답하였음

- 감사합니다